

제13차 ITU 전권위원회 참가기

李 英 圭, 李 東 喆

韓國電子通信研究所

I. 서 언

국제전기통신 분야의 최대 국제행사인 제13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위원회(Plenipotentiary Conference)가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39일간 지중해의 휴양도시 니스(Nice)시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의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전기통신개발국(BDT: Bureau de Development Telecommunication)을 신설하는 등 ITU의 기본적인 조직 개편과 사무총장 등 주요 간부의 선출, 관리이사국 선출등이 있었고, 종래의 ITU 협약(convention)을 헌장(constitution)과 협약으로 분리 체계화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통신 기술 지원문제, 분담금, 공용어 및 실무언어등 ITU 전반에 걸친 정책사항이 토의 및 결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31인의 대표단을 파견시켜 득표활동을 수행한 결과 관리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의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관리이사국에 피선됨으로써 향후 전기통신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니스 전권위원회의 회의경과와 주요 결정사항을 간략히 적어 본다.

II. 니스 전권위원회의 개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1865년에 유선전신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해 설립된 만국전신연합과 1906년에 무선분야의 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무선전신연합이 1932년의 마드리드 회의에서 통합하여 탄생된 12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UN)전문기구의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1952년 처음 가입하였다.

ITU는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이용, 전기통신 업무의 이용 증대와 효율적 운용, 그리고 세계전기통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제간 협력증진등 공동노력을 추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기통신 분야의 기술표준과 통신서비스 기준, 요금원칙 등을 설정하고, 무선주파수와 위성궤도에 관한 국제적 관리를 수행하며, 개발도상국의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것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ITU는 연합의 최고기관인 전권위원회와 주관청회의(Administrative Conference) 관리이사회, 그리고 상설기관으로서 사무총국,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IR),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T), 새로 신설된 전기통신개발국(BDT) 등으로 구성된다.

전권위원회는 ITU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통상 5년마다 개최되며 각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모여서 ITU 헌장 및 협약의 제·개정과 조직 및 운영, 예산 등에 관련된 정책결정 등을 수행한다. 니스 전권위원회는 1982년 케냐의 나이로비 전권위원회 이후 7년만에 개최된 것으로서, 166개 회원국중 143국에서 연 1,208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전권위원회의 폐회기간중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여 선출된 관리이사회가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전권위원회는 본회의(plenary meeting)와 분과위원회(committee)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그밖에 필요에 따라 working group이 구성되었다.

본회의 의장은 나이로비 협약 제77조에 따라 회의 개최국인 프랑스의 Jean. Grenier(French Telccom)의 국제 및 산업국장)씨가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은 5개 지역에서 고위관직 또는 차관급으로서 14명이 선출되었다.

표 1. 본회의 의장단

구 분	지 역	성 명
의 장	개최국	J. Grenier (프랑스)
부의장	A 지역 (미주)	T. Marshall (미국) A. Ituassu (브라질) C. L. Simmonds (콜롬비아)
	B 지역 (서 유 럽)	H. Venhaus (서독) P. Muscat (말타)
	C 지역 (동 유 럽)	Y. B. Zopubarev (소련) A. Popov (불가리아) J. Tomaszewski (폴란드)
	D 지역 (아프리카)	R. Sagna (세네갈) A. W. Amanuel (이디오피아) D. A. Mark (나이지리아)
	E 지역 (아·태평양)	Son Zhiyuan (중국) F. A. Zaidan (사우디아라비아) S. M. Gharazi (이란)

표 3. 주간별 주요 업무

주 간	주 요 업 무
제 1 주 (5. 22-5. 28)	- 수석대표자 회의 및 개최식 (5. 23) -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 의장단 선출 - 분과위원회에 안건 분배 - 각국의 기조 연설 개시
제 2 주 (5. 29-6. 4)	-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개시 - 이스라엘 점령 비난 문제 논의
제 3 주 (6. 5-6. 11)	- ITU 간부 선거 절차 결정 - 남아연방의 ITU회의로부터 축출결의안 채택
제 4 주 (6. 12-6. 18)	-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거
제 5 주 (6. 19-6. 25)	- IFRB, CCIR, CCITT 사무국장 선거 - 관리이사국 선거 - 이스라엘 비난결의안 채택
제 6 주 (6. 26-6. 30)	- 각 분과위원회별 최종 마무리 - ITU 현장과 협약 확정 및 서명 - 제45차 관리이사회 소집 (6. 30)

분과위원회중 제 1 위원회는 회의 일정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로서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의장, 부의장으로 구성되고 의장직은 본회의 의장이 맡았으며, 편집위원회는 불어국 사람이 의장을 하고 영어와 스페인어 국에서 한 사람씩 부의장직을 맡았다.

금번 회의에서는 조직을 담당하는 제 7 위원회가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III. 회의의 주요 쟁점 사항

니스 전권위원회는 흔히 말하는 남북간 대립, 즉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대립이 전기통신 부문의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표면화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1. 개발도상국의 선거 지연 진술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낙후성이 선진국에 기인한다는 논리하에, ITU 본래의 목적인 표준화를 통한 전기통신 기술의 발전보다는 개발도상국에의 기술협력 및 지원 확대를 최대의 목표로 전권위원회에 임

표 2. 분과위원회 의장단

분과위원회	의 장	부 의 장
제 1 위원회 (운영)	J. Grenier (프랑스)	
제 2 위원회 (신입장)	J. Szekely (헝가리)	O. Sanda (카메룬)
제 3 위원회 (예산)	M. K. Rao (인도)	M. Wakrim (모로코)
제 4 위원회 (재정)	M. Ghazal (레바논)	P. Gagne (캐나다)
제 5 위원회 (인사)	F. M. Negro (스페인)	K. D. Meier (동독)
제 6 위원회 (기술협력)	H. Vignon (베냉)	M. A. Yusoff (말레이시아)
제 7 위원회 (조직)	A. V. Araya (코스타리카)	Otaki (일본)
제 8 위원회 (목적)	M. F. Dandato (짐바브웨)	V. Cassapoglou (그리스)
제 9 위원회 (기본법체계)	H. H. Siblesz (네덜란드)	M. B. Tandet (중앙아프리카)
제 10 위원회 (편찬)	M. Thue (프랑스)	R. J. Priddle (영국) V. R. Carreton (스페인)

하였으며, 이를 위해 ITU 조직의 축소 내지는 효율화, 그리고 기술협력 기구 및 예산의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논란이 일었던 것이 CCIR과 CCITT의 통합, IFRB 위원회의 축소, ITU 조직의 피라미트형화 제의, BDT의 신설, 그리고 기술협력 예산의 확대 등이었다.

CCIR이나 CCITT, 그리고 IFRB 등의 활동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전기통신의 발전에 따라 CCIR과 CCITT의 업무내용이 다소 중복이 있고 한계가 모호하다고 주장하면서 통합론을 제기하였고, 현재 5인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IFRB를 의장 1인제로 바꾸고 필요시 비상임 위원을 두는 합의제 위원회를 제안하였으며, ITU의 조직을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피라미트형의 조직으로 구성하자는 의견과 함께 이렇게 하여 절약된 예산을 모두 기술협력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나아가, 개발도상국들은 이와 같은 조직문제의 결론없이 이러한 조직의 임원선거 또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함에 따라 4주째가 되어도 예정된 선거를 하나도 치루지 못하는 등 전권위원회의 전체일정이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통상 과거의 전권위원회의 예를 보면 2주말에서부터 늦어도 3주초에는 사무총장 선거가 있었고 사무차장의 선거와 CCIR 사무국장, CCITT 사무국장, IFRB 위원 선거 등이 제3주내에 끝나며 관리이사국 선거는 대개 4주초 즈음에 실시되었다.

원칙대로 하자면 니스 전권위원회는 나이로비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에 의하여 운영되며, 새로운 조직은 니스 현장과 협약이 발효함으로써 비로서 활성화 되는 것이 통상의 방식이었으며 '조직 논의후 선거'이라는 주장에 의한 일정지연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ITU는 어떤 맥락에서는 전권위원회가 현장이나 협약보다 상위에 있는 만능의 기구라고 생각하는 매우 특이한 전통을 가진 곳이다. 지금의 ITU 체제의 골격은 제2차 세계대전후 1946년에 미국의 아틀란티스 전권위원회에서 채택된 협약에 의한 것인데 그 당시부터 IFRB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5년 몬트폴 전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5명으로 축소하면서 동시에 IFRB 위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조직 논의를 한 후에 그에 해당하는 선거를 해야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진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서 국

제회의에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남북대결의 한 고비인듯 싶었다.

2. 제7위원회의 운영

위와 같은 논의는 그 핵심이 주로 조직변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7위원회에서 다루어졌는데 이 위원회는 의장인 코스타리카의 Araya씨가 개발도상국에게만 유리하게 회의를 이끈다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 서로가 조금도 양보하지 않은 토론이었기 때문에 선거가 될 예정된 제4주가 되어도 문제만 점점 더 복잡해 질 뿐 의사진행은 항상 제자리에서만 맴돌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제7위원회에 의한 문제 해결에 암운이 깃들게 되자 막후 회합에 의한 포괄적 일괄타협 즉, 여러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타협하자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여 그 첫번째로서 의장 Araya씨가 출선하여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중립국인 나라를 포함하여 20국 정도가 참석하여 비공식 회합을 주선하였다. 이 회합은 그후 3차례 더 모였으나 비공식 회합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되었어도 위원회에서는 종전의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또한 의장이 제7위원회를 비공식 위원회와 전혀 무관하게 운영함으로 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전권위원회의 성공과 니스 현장 공포를 최대 목표로 회의를 주최한 주최국 프랑스로서는 매우 불안함과 초조감을 가지게 되어 드디어 본회의의 의장인 Grenier씨가 비공식 막후 회합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 회합은 4주말부터 5주초에 걸쳐서 6회의 비공식 회합을 열었으며 이 회합 역시 20국 정도 참석하였는데 대세는 선진국이 이끄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었다.

3. 타협안

막후 절충에서는 기술협력 예산의 증액과 조직개편 두가지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개발도상국은 기술협력 활동을 ITU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그 비율을 ITU 예산의 25%까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89년의 ITU 총예산이 1억 600만 스위스 프랑이고 기술협력 예산은 5.6% 선인 600만 스위스 프랑임에 비하면 25%라는 요구는 대단히 큰 금액이었다. 개발도상국도 ITU의 활동 중 특히 기술협력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부담금도 증가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ITU 전체 예산의 상한선만 고수하는 정책을 폈다. 예산의 상한을 고수하고 기구축소를 저지하면 결국 기술협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것도 우선순위에 따라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논리였다.

조직개편의 추진 문제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은 이것을 니스 전권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외부 컨설턴트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1991년에 임시 전권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조직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며, 또한 단순히 컨설턴트에 의해 검토시킨다는 것은 불충분하므로 주관청이 책임을 가지고, 주관청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토해야 하며, CCIR과 CCITT, IFRB 뿐만아니라, ITU내 모든 기관에 대해서 그 본연의 목적과 임무, 기능, 활동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논의가 6회에 걸쳐 반복되어도 결론이 없자 의장은 기술협력 예산을 자체예산에서 지출키로 하고, 1990년은 예산의 15%로 하되 전체금액이 1,500만 스위스 프랑을 넘지 않도록 하며, 차기 전권위원회가 개최되는 1994년은 이것을 20%까지로 올리되 전체 금액 한도를 2,250만 스위스 프랑까지로 하자는 안과, 또한 조직개편은 주관청이 추천하는 15내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고급위원회 (high-level-committee)를 구성하여 검토시키자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예산문제는 재정을 담당하는 제4위원회에서도 원칙을 세우지 못하여, 비공식 회합을 몇번 거친다음 대부분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결국, 1990년도의 예산은 1989년 예산에서 900만 스위스 프랑 정도 늘어난 1억 1,500만 스위스 프랑을 상한으로 하되 이중 기술협력비는 1989년보다 900만 스위스 프랑이 증가한 1,500만 스위스 프랑으로서(총예산의 15%) 결정되었는데, 이는 곧 1990년도 총예산 팽창분 900만 스위스 프랑 전액이 기술협력 예산 증액분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1990년 이후의 BDT 예산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년도	BDT 예산 (단위 : 스위스 프랑)
1990	15,000,000
1991	16,800,000
1992	18,700,000
1993	10,600,000
1994	22,500,000

조직개편은 결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타협으로 1989년 11월에 개최되는 특별 관리 이사회에서 구성되는 고급위원회에서 검토케 되었으며, 임시 전권위원회를 1991년에 열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1991년에 개최되는 제47차 관리이사회에서 고급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후 임시 전권위원회를 열 것인지, 아니면 1994년에 일본에서 열릴 전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 5주째의 중간으로서 이때부터 전권위원회는 마무리를 위해 매우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복잡했던 난제들도 단숨에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4. 선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선거는 조직개편과는 관계없이 4주초에 실시될 수 있었다. 핀란드의 Tarjanne 씨와 스페인의 Molina Negro씨가 입후보하여 결과는 타리안느가 76표를 획득해서 당선되었다. 사무총장인 오스트레일리아의 R. E. Butler씨는 재출마하지 않았고, 제4위원회 의장인 레바논의 Ghazal씨는 입후보했으나 선거 직전에 포기하였다.

사무차장은 카메룬의 Jiguep씨가 후보 경쟁없이 122표를 획득해서 재선되었다.

표 4. 주요 임원

구분	성명
사무총장	Pekka Tarjanne (핀란드)
사무차장	Jean Jiguep (카메룬)
CCIR 의장	Richard C. Kirvy (미국)
CCITT 의장	Theodor Irmer (서독)
IFRB 위원	A지역: Gary C. Brooks (캐나다)
	B지역: William H. Bellchambers (영국)
	C지역: Vladimir Kozlov (소련)
	D지역: Mohamed Harbi (알제리아)
	E지역: Makoto Miura (일본)

CCIR 사무국장 선거는 회의 종료 일주일전인 제5주의 목요일에야 겨우 행해졌다. 현직에 있는 미국의 Richard C. Kirvy씨와 유고의 Ilija Stojanovic씨가 경합하여 Kirvy씨가 당선되었고, CCITT 사무국장은 현직의 Theodor Irmer씨가 단일 후보로 132표로 당선됐다.

IFRB 위원도 같은 날에 선거를 실시했다. A지역은 현직의 Brooks씨가 압승하였고, B지역은 Bell-chambers씨가 불과 2표차로 노르웨이의 Boe씨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C지역은 소련에서 Kozlov씨가 경쟁없이 당선되었다. D지역은 4명의 후보중 현직의 Berrada씨가 IFRB의 직원인 Harbi씨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E지역은, 일본의 미우라씨가 중국의 Liu Zhogen씨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당시 신문 보도에 의하면, 6월 4일 발생한 천안문 사건이 일본 승리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관리아사국 선거는 5주 마지막날인 6월 23일 금요일에 실시되었다. 선거에 앞서 관리아사국의 수에 관한 투표가 있었는데 선진국은 현 41개국의 고수를 주장했으나 투표결과는 43국으로 2개국 늘리되 국가수, 인구, 그리고 가능한 한 지리적인 공평이라는 원칙에 따라 D와 E지역에 각각 1개국씩 늘리도록 결의되었다.

표 5. ITU 관리아사국

지역	관리아사국
A지역 (8개국)	캐나다, 알젠티, 미국, 브라질, 멕시코, 자마이카, 콜롬비아, 쿠바
B지역 (7개국)	서독,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그리스
C지역 (4개국)	불가리아, 체코, 소련, 동독
D지역 (12개국)	알제리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카메룬, 탄자니아, 세네갈, 케냐, 말리, 브루키나파소, 모로코, 베닝, 케프베르테
E지역 (12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인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호주, 쿠웨이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B지역에서 영국이 낙선한 것이다. 이제까지 영국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ITU를 선도한 나라였으나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의 선봉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솔직하게 대항한 것이 원인이었는지 낙선하고 말았다. 관리아사국 선거의 과거 분석 기록에 의하면 매해 탈락율(rotation)은 20% 미만으로써 금번 43개국의 경우로 보아 약 100개 비이사국들이 9개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치열한 경쟁으로 비유되었다.

관리아사회는 전권위원회 회의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전권위원회 대리권을 행사하며 ITU 현장과 협약, 규칙등의 규정사항을 시행하고, 전권위원회가 부과한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구로서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에서 첫 출마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12개 관리아사국 중의 하나로 선임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ITU에 가입한지 37년만의 쾌거로서, 이로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분야의 발언권 강화로 세계통신기기 표준화 등 전기통신 정책 결정에 참여와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선진 통신기술 및 정보 수집에 한층 유리해 집은 물론 통신시설의 해외 수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IV. 니스 현장과 협약의 채택

니스 현장과 협약의 채택은 프랑스 정부의 최대 목표이었다. 프랑스는 이를 위해 다소나마 기술협력과 예산에서 개발도상국에 양보하려는 매우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니스 현장과 협약의 채택은 실제로 1965년 스위스의 몬트를 전권위원회 이후 꼭 25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1965년은 나폴레옹 3세가 파리에서 유럽 제국 20개국을 모아 만국전신조약을 체결한 지 100주년 되는 해로서 그 기념으로 레만호 동쪽 몬트롤이라는 마을에서 전권위원회를 열렸다.

ITU 협약은 매회 전권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다시 맺게되는 국제간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조약간의 법적 동일성이나 연속성, 그리고 비준국과 비준을 하지않은 국가간의 법적 관계등 여러가지 모호한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1965년 몬트롤 회의때부터 이미 기본적인 부분과 그렇지않은 부분을 현장과 협약으로 나누려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으며 그동안 일부 반대국이 있어서 지체하다가 나이로비 회의때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초안을 만들도록 결의되었고, 그 검토결과를 기초로하여 이번 회의에서 현장과 협약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니스 현장과 협약을 채택함에 있어 최후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1994년의 정규 전권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직심의를 위한 임시 전권위원회 개최규정을 현장에 삽입하자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서 선진국은 임시 전권위원회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특별한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대립했다. 현재의 나이로비 협약에서는 심의항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전권위원회를 열면, 광범위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끝내는, 조직 심의만을 위한 임시 전권위원회는 허용하나 그 경우 심

의 결정한 조직에 관한 선거만이 가능하다고 한 타협이 이루어져 현장과 협약이 무사히 채택되게 되었다.

ITU의 법률문서로서는 기본 법률문서인 현장과 이를 보조하는 협약, 그리고 업무규칙으로서 국제전기통신규정과 무선규정이 있다. 현장은 전문을 포함하여 5장 47조이며, 협약은 7장 35조로서 그 성격은 대체적으로 보아 ITU의 목적을 세계적인 표준화의 촉진과 인구 회소지역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확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 등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보완하였고, 협약과 업무규칙이 구분됨에 따라 현장의 경우에는 발효조건이나 수정요건 등 법적인 구속력을 한층 엄격하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현장과 협약은 55개국이 비준, 수락내지는 승낙한 30일 후에 동시에 발효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대략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V. 기타 주요 결정 사항

1. 전기통신개발국(BDT)의 신설

기술협력기구에 관하여 선진국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ITU의 기술협력부(TCD: Technical Cooperation Department)와 선진국의 자발적인 지원금에 의존하는 전기통신개발센터(CTD: Center for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의 통합과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집행을 주장한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오히려 상기 조직의 확대와 재원의 보장, 나아가 WORLD-TEL이라는 ITU가 최초 출자하는 상업 기구를 창설하자고 하는 다소 무리한 제안까지 주장하였다.

결국은 비록 자금난은 있지만 CTD는 운영개시 2년 밖에 안된 것이므로 앞으로 2년간 더 존속시켜 보기로 하였고, TCD는 해체하기로 하였다. 대신 사무총국, IFRB, CCIR, CCITT 등과 동급의 상설기관으로서 BDT를 설립하되 차기 전권위원회에서 BDT 사무총장을 선거하며 그동안은 사무총장이 TCD의 인원과 자원을 인계받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BDT는 프랑스 약어로서 영어로 말하면 TDB(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이나 ITU는 프랑스어의 입김이 강한 곳이므로 약자인 경우에도 BDT를 사용한다.)

BDT의 임무는 UN의 개발기구나 여타 재단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UN 전문기구와 집행기구와 같은 이원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기술협력과 자원활동을 제공하고 추진함으로써 전기통신개발을 촉진하고 증대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 기능은 각국의 사회 경제 개발 계획 추진에 있어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정책입안자들의 정보 제공 및 정책적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전기통신망과 서비스의 개발, 확장 및 운용을 촉진하고, 지역통신기구 및 개발재정 담당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통신 확장의 강화와 참여를 촉진한다. 그리고, 적절한 기술선택과 기술이전 등에 자문하며, 전기통신분야의 특별 프로젝트 연구를 포함하여 기술, 경제, 재정, 경영 및 정책사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 및 지역통신망을 계획함에 있어서 국제자문기구와 협력하며, 전기통신개발회의를 준비 지원하고 의제 및 일정을 작성하여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분담금

분담금에 대해서는 각국이 분담등급을 임의로 선택하고 이를 조약으로 체결하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의 1/8단위부터 40단위까지 19등급으로 되어 있는 분담단위에 1/16, 23, 28 등 3등급을 더 추가하여 세분화하였다. ITU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참여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국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8 또는 1/16단위를 두었으며 이는 UN에서 결의된 최빈국가(LDC)나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어 관리이사회가 특히 인정하는 나라에만 적용된다.

공인민간운영회사(RPOA)나 과학산업단체(SIO)의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의 1/2단위인 최저단위를 1단위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선진국의 반대로 1/2단위 및 정부 각출분 비 1/5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RPOA, SIO는 CCIR과 CCITT의 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의해서 이익을 얻으므로, 가능한 적어도 1단위는 선택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1단위이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5단위로 상향토록 제안함으로써 예산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던 전권위원회의 회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였다.

3. ITU 공용어 및 업무용어

현재는 평상업무에 사용하는 업무용어(working language)로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3개 언어, 그리고 회의 등 단기간의 제한된 업무에 사용하는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서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

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가 지정되어 있으나, 아랍권, 소련, 중국 등이 업무용어에 자국 언어를 추가토록 제안하였다. 토의 끝에 업무용어에 3개 언어를 추가하고 공용어를 폐지하되 비용 절감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용어의 사용을 3개 언어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1개 언어 추가시 년 1,300만 스위스 프랑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4. 차기 일정

ITU가 주관하는 향후 주요회의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스펙트럼 특정부분의 주파수 분배를 위한

WARC(스페인, 1992년 1/4분기에 4주 2일간) 1992년은 콜롬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500주년 기념의 해이고, 또한 바르세로나의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이기도 하다. 작년 개최된 WARC-ORB에서는 일부 주파수의 재분배에 관한 결의가 있었고, 1988년 WARC-MOB과 1987년 단파 방송을 위한 WARC-HFBC 회의에서도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

2) HF대역 방송 업무에 관한 WARC

(제네바, 1993년 1/4분기에 4주간) 1987년에 WARC-HFBC가 있었으나, 여러가지이유로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3) 제14차 전권위원회(동경, 1994)

1991년의 관리이사회에서 최종 확인토록 되어있다.

5. 정치 문제

아랍권에서 이스라엘 축출문제를 제안하여 투표에(찬 47, 반 23, 기권 20) 의하여 의제화 되기는 하였으나 ITU에서는 정치문제는 배제하자는 미국 등의

설득과 막후 교섭에 의하여 아랍측이 제안을 철회함으로써 축출 대신 팔레스타인 및 아랍 점령지에 대한 통신시설 파괴를 규탄하고, 복구를 요청하는 규탄 결의안만 채택되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ITU에서 축출하기 위한 25개국 공동제안에 대한 열띤 토의끝에 ITU내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결의가 투표로서 통과되었다(찬 67, 반 22, 기권 25).

VI. 결 론

이번 회의의 참가 결과, ITU는 전기통신분야의 표준화기구와 국제간 기술협력기구로서의 두가지 기능성격을 뚜렷이 보여 주었고, 그 비중도 점차 개발도상국 기술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간 기술협력기구로 이전되어 가는 것을 실감케 되었으며, 또한, 관리이사국 피선을 계기로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 분야의 선진그룹에 끼이게 되었음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은 대체로 재정적인 지원과 기술적의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보다 적당한 것은 인적자원에 의한 기술적인 지원분야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통신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은 국제적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강화와 제도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기 구성된 각 연구반에서는 철저한 사전검토와 준비를 충실히하여 모든 ITU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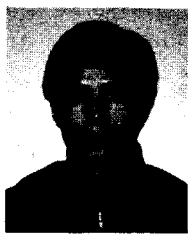
筆者紹介



李 英 圭
1943年 12月 22日生
1970年 2月 한양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1987年 8月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졸업

1972年~1977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공중선연구실 선임연구원

1977年~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TDX 개발단 SW 공학연구부 연구위원



李 東 喆
1956年 11月 20日生
1980年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86年 건국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

1982年~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표준 연구센터 근무